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정+정의 '공정경제' 혁신·포용성장 토대

文 대통령,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

정부, 사업특성 고려 개선안 통해 공공기관 자발·지속적 관행개선 '모범거래 모델' 경제활력 높일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3번째 공정경제 전략회의(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11월과 지난 1월에 진행된 전략회의의 연장선상 격으로, '문재인 정부 2년간 추진된 공정경제 성과' 및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등을 점검하는 자리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전략회의 때 "공정 경제는 공정과 정의가 경제 생태계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국민들이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를 체감할 수 있다. 공정경제는 또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토대다. 공정 경제 없이는 혁신도, 포용도 불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사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며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담은 '모범거래 모델'(공공기관이 자율·선택적으로 기준 불 공정 거래관행 수정)'을 제시했다. 국민의 이익과 경제활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범거래 모델을 통해 ▲공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항 및 면책 규정 삭제, ▲협력업체에 비용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않는 정당한 대가지급 보장(공공기관-협력업체의 이익 및 부담 공정배분), ▲기

술 및 정보 소유와 사용 권한 정할 때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 확대 (이 경우 협력업체의 이익과 노동자 안전 확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이에서 발생할 불공정행위 차단(공동도급방식 등 수평적 계약방식 도입, 공공 기관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등) 등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정책 기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공정경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익감시활동을 통해 부정거래 등을 막는 '견제의 축'을, 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성과를 나누는 소득주도성장은 '분배의 축',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은 '일자리 창출의 축'을 각각 구성하고 있다. 3개 축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 때 언급한 '혁신적 포용국가'가 구현될 수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게 공공 기관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전략회의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주제로 진행됐고, 당정청 주요인사 및 주요 공공기관 관찰들이 참석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文, 이스라엘 대통령 초청… 14일 방한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은 리블린 대통령과 오는 15일 오전(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라며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한은 2010년 페레스 대통령 이후 9년만"이라고 이렇게 알렸다. 페레스 대통령의 방한 당시 리블린 대통령은 자국 내 통신부 장관을 지냈다.

한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리블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1962년 수교 이래 지난 반세기간 발전해온 양국 협력관계를 평가하면서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인적·문화교류, ▲한반도 및 중동정세 등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승준 기자

李·李 투톱, 경제위기 극복 '현장투어'

〈 이해찬 민주당 대표·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최저임금 개선 등 업계 건의 들어
이인영, 한국노총·대한상의 방문
'경제극복' 해법 경제인에 자문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 대표는 9일 각각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경제 위기 극복'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각 경제단체는 노동·경제 등 현안에 대한 법안 조속 통과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먼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등과 만나 업계 건의를 들었다. 중기중앙회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개성공단 재가동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을 위한 세제 개편 지원 등 45개 과제를 이 대표에게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추가경정예산과 경제 활성화 법 등을 조속히 통과 시켜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의 경우 같은 날 오전 한국노총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찾는 것을 제일 먼저 하고 싶었다"며 "한국노총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제1의 협력자"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노총이 부담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 참여하고, 책임 있는 경제 주체의 모습을 보여줘 감사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종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전하기도 했다.

경사노위는 최저임금 등 사회 중대 현안을 다루는 대통령 직속 대화 기구다. 경사노위는 현재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위원 3명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가동을 멈췄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투쟁 예고로 당정(여당·정부)과 마찰을 빚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원내 대표에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의제는 사실상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문제는 풀기 어려울 정도로 꼬였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과 만나 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등으로 심화한 경제 악화에 공감하며 박 회장에게 "경제인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일본 상황을 보면 우리 기업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며 "내 나라 말을 못쓰던 시절에도, 심지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우리는 기업을 지켜왔다"고 한탄했다. 이어 "정치가 기업으로 하여금 약속을 어기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못 내리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또 "기업이 약속을 상호 간에 지킬 수 있게 (정치권이) 도와달라"며 "기업이 건의한 융·복합 사업이나 서비스업, 노동이슈 입법 등에도 전향적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경제 활성화법'과 '규제 완화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말한 것이다.

박 회장은 앞서 지난달 17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올해 들어 (경제가) 서서히 골병이 들고 있다"며 "정치가 기업과 국민의 살림살이를 불들어줘야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충고한 바 있다. 특히 "경영이 흔들리는 기업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 참담하기 짜이 없다"며 '의원님께 드리는 심의리포트'라는 제목의 재계 현안을 주려 각 당 원내대표에게 건내기도 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다른 경제단체와도 연이어 회동 할 예정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카톡 채팅방서 법률상담 성행… 무료지만 서비스 질 낮아

'의명 법률상담' 오픈채팅 명암

변호사 실제 방문수임으로 연결
법률상담 질 하향평준화 우려도

급격히 증가한 변호사 숫자와 함께 법률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카카오톡(카톡) 서비스인 '오픈채팅'을 이용한 법률상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익명으로 접근이 가능한 오픈 플랫폼인 카톡 특성상 변호사가 아닌 유저가 법률상담 채팅방에서 상담을 하더라도 단속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전문적인 변호사가 채팅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법률서비스의 질이 낮게 보여 전체적인 법률상담의 질이 하향평준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메트로신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색창에서 '법률 무료 상담'이란 키워드를 입력하자 단체 법률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인 그룹채팅방이 20여개가 검색 됐다. 1대 1 채팅방은 150여개에 달했다.

지난 2015년부터 카카오톡에서 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법률 무료상담'을 검색한 화면.

법률사무소 이름을 게시하거나 사진을 게시한 곳도 있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개인회생' 방을 이용해봤다는 A씨는 "주로 전문적인 변호사는 채팅방 안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 방에서 '내가 이 분야에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반인들만 활동하는 것 같다"며 "포털 '지식인'의 1대1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법률 상담 오픈 채팅의 순기능을 무시할 순 없다. 한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으로 급격히 증가한 변호사 숫자와 함께 유사직역 갈등까지 불거져 변호사 업계가 침체에 빠졌는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인해 실제로 방문 수임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법 상담'이라는 이미지를 카톡 상담을 통해 쉽게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료상담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는 법률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손현경 기자 son89@